

'6.3 지방선거'에 따른 정국 전망과 기업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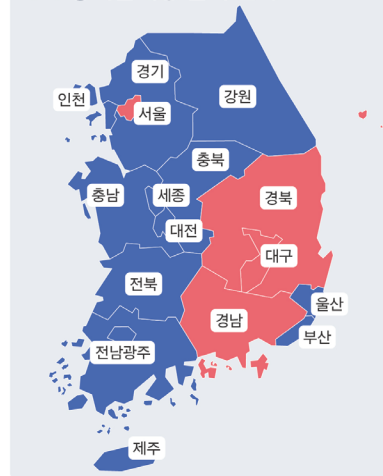
Summary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 여당이 전국 12개 광역단체를 장악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했으나 서울을 내주며 정치적 명암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원팀(One-Team)'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기본사회·RE100·노동 규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드라이브는 이전보다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실무 논리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관여'로 대응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별 조례까지 포괄하는 입체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국회와 다각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선거 이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1. 6.3 지방·보궐선거 결과: 여당의 승리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당선자를 내며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곳을 지키는 데 그쳤지만 서울에서 막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총 14곳 중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무소속 후보(한동훈)가 1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반에서 이겼음에도 서울에서의 패배로 빛바랜 승리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6.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정당별 의석



2. 선거 결과의 함의와 정부 정책에 미칠 영향

이번 6.3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이하 “6.3 선거”)는 지방정부·의회의 재구성과 국회 의석 변화를 넘어 정치·행정 주도권의 변화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원팀(One-Team)’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속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당 광역단체장들과 어떻게 손발을 맞춰 나갈지 주목됩니다.

가. 6.3 선거의 함의: ‘불완전한 원팀’ 체제의 서막

6.3 선거는 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석권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원팀(One-Team)’ 체제가 구축된 듯 보이지만, 그 정치적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복잡한 양상입니다.

전국적인 지지세를 확인하며 지방 권력의 전면적 교체에는 성공했으나, 수도권 민심의 상징인 서울에서의 패배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과는 별개로 여당이 마주한 ‘확장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에게 ‘전국적 승리’라는 성적표와 ‘서울 민심’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와 대다수 지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핵심 거점인 서울시와의 관계 설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원팀’ 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과 기업 경영 환경에 있어, 이 미묘한 정치적 불균형이 어떠한 정책적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 드라이브 가속 예상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중앙당 공약은 ‘5극3특’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성장 전략, 민생안정·공정사회 등입니다. 이들 공약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 및 대통령 공약사항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불완전한 원팀’이라는 정치적 지형을 감안할 때 이재명 정부는 서울시와의 정책적 온도 차를 전국적인 정책 드라이브로 상쇄하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회 다수 의석과 함께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의 ‘지방행정권’을 지렛대 삼아,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은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음 5대 과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 **기본사회 공약 본격 시행**

이재명 정부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 가치 구현을 위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어민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교육·돌봄·의료·교통 등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과 관련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등이 본격 논의될 것입니다.

- **지방 신산업 및 공공기관 이전**

AI·반도체·바이오 등 테크 중심의 지방 특화 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이 여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RE100 및 에너지 인프라 전환**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법안의 골자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입주 기업에 예산타당성 평가 면제, 국가 재정 지원, 송배전 설비 우선 구축 등입니다.

- **노동·민생안정·공정사회 관련 규제 강화**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조례 확대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투자 규모와 함께 재해발생 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주목됩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해 법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관심을 가져야 할 법안입니다.

- **헌법 개정 등 추진**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의 헌법적 근거 마련, 계엄요건 명확화, 주민소환제 도입 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 추진도 선거가 없는 2027년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3. 향후 정국 전망: 정치 변동성 확대

가. 하반기 국회, '협치'보다 '속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단 선거는 6월 5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단 구성에 이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6.3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원 구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 단독 구성' 카드로 원 구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큼니다. 하반기 국회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입니다. 민주당이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위 알짜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요구하며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하반기 국회 구성이 예년보다 조기에 되더라도, 하반기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휴가 시즌이 지난 8월 중순 결산국회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여당: 정청래 대표의 '강한 리더십'과 변화 가능성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전임 당 대표(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26년 8월까지입니다. 6.3 선거 결과,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한 개혁 지도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정 대표 주도하에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1:1로 일치시키는 '1인 1표제'에 따라 연임의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개편으로 민주당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인천에서 당선된 송영길 의원 등의 등장은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니다. 이와 함께 전북지사 공천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논란'은 정 대표 리더십의 잠재적 균열 요인입니다.

다. 야당(국민의힘): 리더십 공백과 당내 권력 재편

국민의힘은 지도부 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 체제에 대한 책임론은 당내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갈등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큼니다. 향후 꾸려질 비상대책위가 극심한 리더십 공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부산 북구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은 다시 보수 진영의 중심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의원의 국회 입성은 지도부가 와해된 국민의힘의 권력 공백 속에 보수 진영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세력 재편을 이끄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내 협상력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국회 전면 보이콧과 장외 집회 등 강경 대처로 활로를 모색하겠지만, 압도적 의석 차이 앞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4. 제언: 정책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3 선거에서 지방권력의 주도권이 여당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의 정책이 지방까지 관철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기업은 권력지형의 대대적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 정책 형성 단계에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체제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후 대응하면 이미 늦습니다. 정책이 아이디어 단계나 입법 예고 단계에 있을 때, 기업의 실무적 데이터와 논리를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관여가 필수적입니다.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취지는 살리되 기업 현장의 현실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나. 규제 리스크 관리의 범위 확장

중앙에서 지자체 조례까지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방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임금, 안전보건, 환경 규제 등 지자체 조례는 기업 운영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의 조례 움직임을 데이터화하여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야 합니다.

다. '정책 네트워크' 강화 집중

여당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잠재적 대선 주자인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독자적 세력 구축과 정책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성을 심층 분석하고, 이들과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미래 비전과 정책적 연결 고리를 만드는 '정책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최석림 변호사

T 02.3404.0654

E seokrim.choi@bkl.co.kr

김형욱 고문

T 02.3404.7350

E hyeongwoog.kim@bkl.co.kr

조용복 고문

T 02.3404.1080

E yongbok.cho@bkl.co.kr